

금융정책 방향과 새로운 금융비전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들어가는 말

2008년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벌써 5년이 되어가지만, 전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대내 환경도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저금리의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양적투입의 확대를 통한 성장모델의 한계에 직면하는 한편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학적 변화와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2월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힘을 직시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 또한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금융이란 그릇에 담아내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창조금융’, ‘튼튼한 금융’, ‘따뜻한 금융’을 금융부문의 세 가지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세부과제들을 추진해 왔다. 동시에 이러한 틀 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우리 금융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등 4대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이들 현안과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심도 깊은 논의와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핵심 정책과제와 금융산업 비전의 추진에 앞서 선결되어야만 하는 민감한 주제들이다. 미래를 위한 실질적 포석이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과 관행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합의가 담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3대 핵심정책이나 4대 금융현안 과제는 우리 금융산업이 튼튼히 뿌리내리기 위한, 보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안과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고, ‘창조금융’, ‘튼튼한 금융’, ‘따뜻한 금융’의 3대 핵심 금융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새로운 금융비전을 논의할 시점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패러다임 전환기, 선진금융 및 실물부문 대비 상대적 열위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금융산업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새로운 금융비전의 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갖추고 향후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할지 보다 미래지향적 금융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실현 가능한 금융비전이 제시되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추진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2013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우리 금융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금융비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먼저 한국 금융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 이어 3절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추진되어 온 3대 핵심 금융정책과 그 내용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향후 우리 금융산업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관련 과제들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제시한 뒤, 5절을 통해 본고의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대내외적 불확실성

돌이켜보면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활기차게 출범한 새 정부들이 예상치 못했던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봉착하면서 부득이하게 장기적 개혁정책들을 포기하고 위기대응 국면으로 전환해야만 했던 뼈아픈 경험들이 존재한다. 정책방향과 장기적 비전들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위험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에 기반하고 있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위험요인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기회요인들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향후 우리 금융산업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지향점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금융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요인에 대하여 개략적이거나 살펴보기로 한다.

1) 대외 여건: 세계경제의 4대 불확실성

소규모 개방국가이자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한국은 태생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다수의 위기들은 해외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다가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흐름이 갑자기 반전되면서 촉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모두 해외자본의 흐름에서 발생한 서든스탑(sudden stop)¹⁾이 가장 강력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1) 예상치 못한 외국 자본유입의 중단과 이에 뒤이은 대규모 자본유출의 발생으로 외화유동성이 고갈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는 한편으로 다자간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중첩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아시아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금융협력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러한 위기대응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보다 강화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러한 모든 사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위기상황이 도래할 경우에는 정확한 정책적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최근 세계경제의 4대 불확실성에 주목하면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첫 번째 불확실성은 선진국 특히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향방에 기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적완화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고용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13년 6월 19일 개최된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버냉키 의장이 2013년말이 도래하기 전에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중반 경 양적완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추가적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와 종료 일정에 대한 최초의 발언에 국제금융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시장의 변동성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국내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버냉키 의장의 언급 이후 외국인 자금의 유출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 및 채권가격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고, 환율은 연중 최고치로 치솟기도 하였다(<표 1> 참조).

<표 1> 국내 금융시장 동향

(단위: pt, 원, %)

	2013년5월말	6월18일	6월19일	6월20일	6월21일	6월24일	6월25일	6월26일
KOSPI	2,001.1	1,900.6	1,888.3	1,850.5	1,822.8	1,799.0	1,780.6	1,783.5
KOSDAQ	577.9	534.3	531.4	525.6	520.9	508.7	481.0	493.1
원/달러	1,129.7	1,131.1	1,130.8	1,145.7	1,154.0	1,161.4	1,160.2	1,154.5
원/100엔	1,124.4	1,186.5	1,186.7	1,177.5	1,178.8	1,188.4	1,186.1	1,184.3
국고3년	2.78	2.77	2.81	2.94	3.04	3.12	3.02	2.97
CD91일	2.69	2.69	2.69	2.69	2.70	2.69	2.69	2.69

자료: 금융위원회.

버냉키 의장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언급한 것은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격한 반응을 목격한 버냉키 의장이 7월 10일 전미경제연구소(NBER)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당분간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은 다소 진정되었다. 두 사건 사이 3주간에 시장이 보여준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

서는 과도한 반응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향후 실제로 양적완화가 종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사전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해함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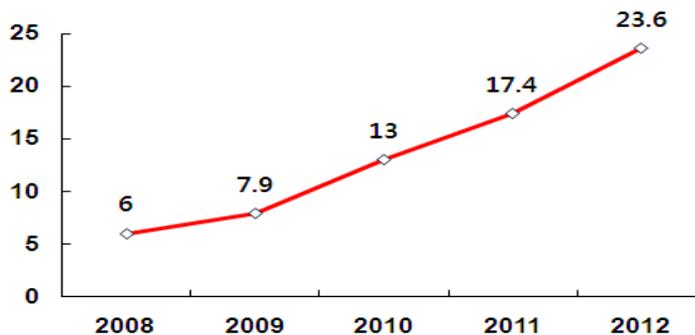
버냉키의 발언대로 경제여건에 따라 양적완화의 축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 축소의 범위 및 향후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앞서는 본격적 양적완화 종료는 신흥국들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이탈을 초래함으로써 자칫 신흥국 중심의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신흥국발 위기 조짐에 대해 거듭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양적완화 종료가 가져올 수 있는 환류(feedback)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 불확실성은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이다. 중국이 누적된 과잉투자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을 나타내면서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IMF도 중국이 경제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향후 성장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 간의 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축정책이 자칫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피치(Fitch)사는 2013년 4월 9일 중국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위험성 등을 근거로 위안화 표시 장기국채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하기도 하였다. 최근 3년간 크게 확대된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2년말 현재 중국 GDP(52조 위안)의 4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만약 그림자금융에서 부실이 확대될 경우,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되고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중국 그림자금융 추이

(단위: 조 위안)



자료: China Audit Office, Goldman Sachs.

세계경제의 본격적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은 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발 위험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와 중국 경제가 긴축과 구조조정을 넘어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불확실성은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이다. 아베 정부는 2~3%의 인플레이션 목표, 무제한적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고 표방하고 있다. 연화약세 및 공공투자 집행 등으로 아베노믹스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2013년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다. IMF도 2013년 7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일본의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보다 0.5%p 상향조정된 2.0%로 발표한 바 있다.

아베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성공할 경우 소비·투자 등 민간의 성장 모멘텀이 회복되면서 안정적 성장세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구조개혁의 성과가 미흡하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내수회복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확장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가 부상하여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기가 급락할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수준의 성장전략으로는 안정적인 물가상승률과 성장세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아베노믹스는 향후 보다 큰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타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은 내수확대를 통해 일본 경제가 회복될 경우 주변국과 세계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및 실패 어떤 경우에도 부작용이 예상된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에 악재로 작용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로부터 일본 자금이 대거 이탈하게 될 우려가 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경우에도 일본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익성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아베노믹스의 추진상황과 파급효과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리스크들을 사전적으로 그리고 보다 철저히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불확실성은 유럽 경제의 향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가 발발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성장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전체로도 2012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Δ 0.6%)를 기록한 바 있다. 유럽 지역은 2013년도에도 고용부진, 역내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게다가 유럽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독일 경제마저도 2013년도 1/4분기에 13분기만에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어 위기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부진이 유로존 핵심국가들로까지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재정위기가 발발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反)긴축 정서가 유로존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추가적 불안요인의 하나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러한 불만이 2013년 2월 벌어진 총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되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다행히 4월말에야 가까스로 연정구성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5월 정책금리 인하(0.75→0.5%) 등 재정긴축 기조가 일부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소 경감되었다. 그러나 올해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유로존 재정긴축 기조의 지속여부에 대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실로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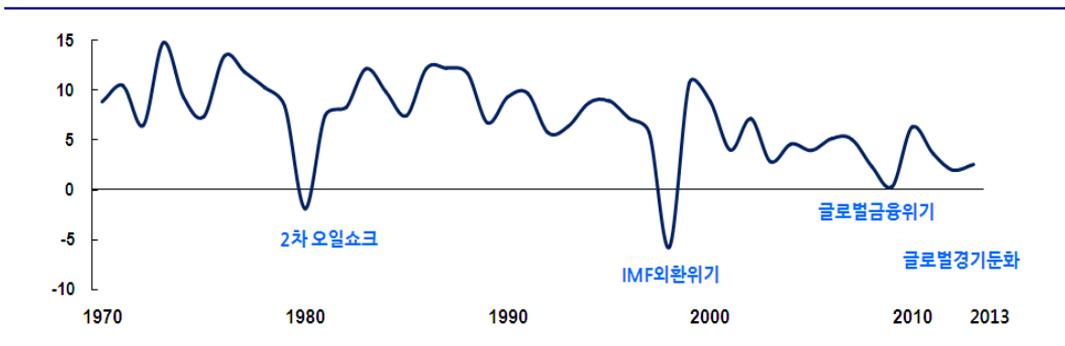
2) 대내 여건: 저성장 및 고령화

우리나라 경제는 전술한 세계경제의 4대 불확실성 중 어느 하나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이들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거나 만에 하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재차 위기대응 국면으로 전환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내부적 여건 또한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3년 1/4분기 현재 이미 8분기 연속으로 잠재성장률에 미달하고 있다. (2차 오일쇼크 기간을 포함하고도) 연평균 8.9%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197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시기나 평균 5.2%대의 성장률을 시현한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기와 비교할 때, 최근 들어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다(<그림 2> 참조).

<그림 2>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전년동기대비)

(단위: %)



주)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2.6%(한국은행, 금융연구원).

2013년도 성장률은 지난해(2.0%)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더구나 잠재성장률 자체가 2010년대 연평균 3.8%에서 2020년대에는 2.9%, 2030년대에는 1.9%로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

망도 제시되고 있다. 투자부진으로 자본축적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정체 혹은 하락하게 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기조가 고착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의 성장률 둔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행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겠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수준의 고령화가 핵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이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은 2018년(노인비중 14.3%)에 고령사회, 2026년(노인비중 20.8%)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진입하는 기간은 26년으로 일본 35년, 미국 90년, 프랑스 154년에 비해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국가별 고령화 사회 도달 연수

구분	도달연도			소요연수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한국	2000	2017	2026	17	9
일본	1970	1994	2005	24	11
독일	1932	1972	2010	40	38
미국	1942	2014	2032	72	18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또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2060년에는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을 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면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고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축적도 둔화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2011년도에 발간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³⁾은 45.1%에 달해 OECD 회원국 평균인 13.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의 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3월말

2)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의미하며,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란 14% 이상,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란 20% 이상인 경우로 정의된다.

3) OECD는 노인 빈곤율을 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이 중위가구(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 소득의 절반 미만인 가구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73.6%에 달하고 있어 노후의 안정적 소득흐름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도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복지체계와 금융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전 재정도 위협받고 성장활력도 저하되는 악순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경제가 일정한 발전단계에 도달하면 성장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선진 경제권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각종 경제·사회·복지 인프라가 아직 선진 수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화를 최대한 늦추거나 반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 발전전략을 재점검하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잠재 고령인구들을 대상으로 노후의 소득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중층적 연금구조를 확립하고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주요 금융정책 추진현황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이다. 국민 개개인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장과 복지를 순환적 관계로 포용하고, 균형성장의 원칙을 확립하여, 따뜻한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정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분야 전략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그리고 ‘민생경제’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창조경제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벤처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과제들을 포괄한다. 둘째,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들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셋째, 민생경제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 금융부담 완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 경제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도 이러한 국정비전과 3대 전략을 근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튼튼한 금융’, ‘따뜻한 금융’을 세 가지 핵심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창조금융이란 ‘창조경제’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고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이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튼튼한 금융은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는, 그리고 국제적 위기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금융산업과 제도를 구축하고 정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칭한다. 따뜻한 금융은 금융포용력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괄한다.

금융분야 3대 핵심정책과 세부 과제들은 우리 금융산업이 튼튼히 뿌리를 내림으로써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3대 정책방향과 하부 과제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금융”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경제활동의 틀이 바뀌는 만큼 창조경제에서는 금융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만을 가지고도 창업이 가능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의지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은 혁신적인 수준의 맞춤형 금융지원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첫째, 창조금융은 창조적 지식과 아이디어의 사업성에 대한 사전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원활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각각의 창조적 지식과 아이디어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하고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창조경제 활성화에 있어 첫 번째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존에 금융회사들은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 대출관행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해 왔으나, 이는 창조적인 창업의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창조경제가 도모하는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창업관련 자금공급이 이러한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 기술성, 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업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심사역량이 필요하다. 창조적 지식과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화함으로써 창업 투자에 있어서의 사전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고위험(high risk)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조금융은 기업의 성장 단계를 관통하여 자금의 연속적인 흐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창업 이후에도 기업은 성장과정에서 높은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수차례 자금의 초과수요에 직면하게 된다. 자금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생태계에 단절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장단계들을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일컫는다. 특히 위험이 큰 분야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수많은 창조적 지식이 결국에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장되게 된다.

통상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기대수익의 차이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약 세 번 정도의 자금절벽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업자금이 소진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확대되는 창업 2~3년 뒤에 첫 번째 죽음의 계곡이 발생한다. 이후 첫 번째 위기를 넘기게 해주었던 엔젤투자 자금이 소진되기 시작하고, 기술 사업화, 설비투자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단계에서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이 발생한다. 끝으로 초기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본격화하고, 사업확장에 필요한 추가적 자금수요가 발생하면서 세 번째 죽음의 계곡에 직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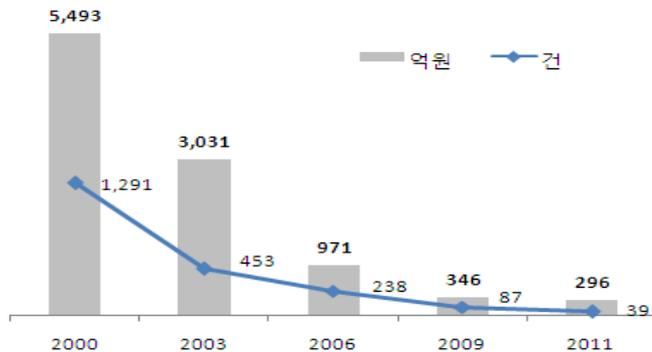
창조금융의 역할은 기업이 이러한 죽음의 계곡에 빠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곡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과 병행하여, 잔존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유발하는 외부성을 정책적으로 보정해줌으로써 충분한 민간자금이 공급될 수 있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적재적소에 공적 보증이나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외부성을 축소시킴으로써 민간자금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5년간 추진된 벤처·창업 정책들이 비교적 빠른 기간에 벤처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여 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의 벤처·창업 지원시스템이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무엇보다 민간의 투자욕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못함에 따라 벤처생태계 내의 투자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 특성에 맞는 투자공급의 부족, 중간 회수시장의 미성숙, 재투자·재도전 여건의 미흡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2012년말 기준으로 창업자의 78.5%가 보증에 기반한 은행대출을 통해 창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전체 자금조달 금액 중 융자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소 및 창업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융자 이외 선택의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융자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항시 부족한 현금흐름에 노출되어 있는 초기 벤처 및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창업과 경영상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 엔젤투자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엔젤시장의 규모는 2000년대 초반 벤처붐이 붕괴된 이후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국내 엔젤투자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 5월 15일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는 창조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의 윤곽이 나타나 있다. 동 방안은 전술한 벤처생태계의 자금 병목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즉 창업

에서부터 성장 및 회수, 더 나아가 재투자·재도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금이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초기 단계의 자금조달이 용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창조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활용함으로써 중단 없는 자금흐름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중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책금융과 민간이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공공자금과 민간자금 간의 이익·손실 배분을 차등화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해 나가되, 시장실패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자금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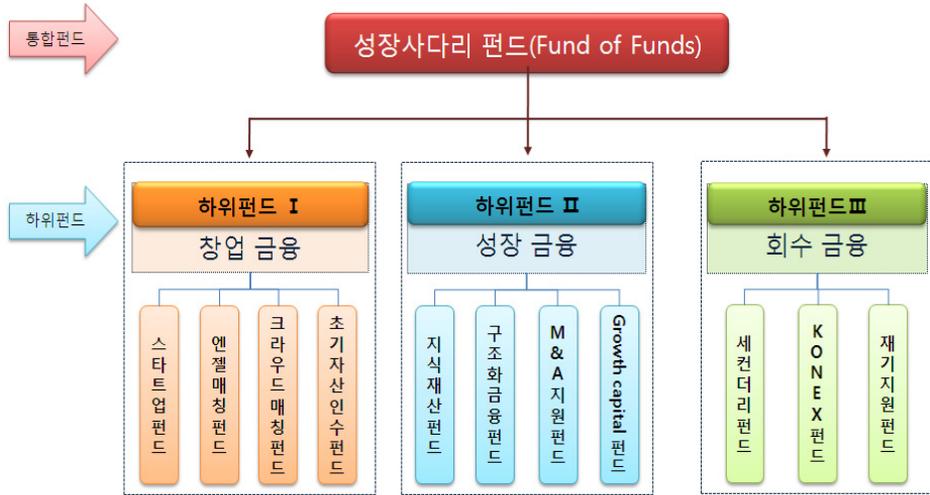
둘째,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 시스템 하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외에는 따로 벤처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다. 코스닥 상장에도 평균 14년이 소요된다는 점과 통상적인 벤처투자의 존속기간이 평균 7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간 회수시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코스닥시장 전(前) 단계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가 2013년 7월 1일에 개장되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벤처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회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창업초기의 기업특성에 맞게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하였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2조원(정책금융 등 0.6조원, 민간 1.4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를 조성하여 2013년 3/4분기부터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펀드는 향후 3년간 총 8조원(정책금융 등 2조원, 민간 6조원) 규모로 운용될 계획이다. 성장사다리 펀드는 창업, 성장, 회수 등 각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목적과 구조를 가진 세 개의 모(母)펀드로 구성되고, 각각의 모펀드는 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인 지원목적を 가지고 설계된 자(子)펀드들을 거느리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조합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그림 4> 참조).

이 펀드는 투융자 중심의 복합적 자금지원 플랫폼을 형성하여 기존 용자중심의 자금구조를 보완하고, 정책금융이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실패와 시장공백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식재산 금융, IPO, M&A 등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창조금융 생태계가 융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성장사다리 펀드의 구조(예시)



셋째, 재도전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서는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는 것을 가로막는 다양한 관행과 제도가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문화를 형성하고 건강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펀드를 운영하여 재도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재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엔젤매칭펀드를 우대 운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는 연대보증제도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2012년 5월에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부터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되었다. 기존의 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 금융위기가 없는 “튼튼한 금융”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해낸 과정이 세계적 모범 사례로 회자될 만큼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과거에 비하여 놀랄 만큼 성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새롭게 맞닥뜨리게 될 도전들에 대해 항시적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던 1997년도 외환위기, 2003년도 카드사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저축은행 문제 등과 같은 위기국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한 금융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튼튼한 금융을 위한 금융정책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금융시스템 내부의 외환관련 위험요소들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금융통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외환리스크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장상황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으로, 만일의 경우 시장의 기대를 압도할 만큼 충분하고 단호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튼튼한 금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야 한다.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국제규범에 근접한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금융회사들의 실질적 관행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따라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실제적 관행의 개선은 향후 우리나라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실패는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주 대표성을 강조하는 일반기업의 지배구조와 달리 예금자, 금융당국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성 또한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3년 4월 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가 출범되었고, 이후 7차례의 회의를 거쳐 6월 17일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동 방안은 실제 관행의 개선과 지배구조의 공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재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해상충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문화하는 등 종전보다 이사회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둘째,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활동내역과 보수를 공시토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공익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튼튼한 금융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 범죄이다. 불공정거래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SNS·증권·방송·인터넷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불법행위의 복잡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3년 4월 18일에 관련 정부기관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불공정거래의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첫째, 인지 단계에서는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제보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조사·

4) 불공정거래 발생건수: 2010년도 194건, 2011년도 222건, 2012년도 271건.

수사 단계에서는 금융위원회 내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으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조사·수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조치·제재 단계에서는 금전제재를 강화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과징금 징수율 제고,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2013년 7월 8일에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심화 및 회사채 시장 전반의 불안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 역시 튼튼한 금융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시장 친화적 방식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둘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과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충을 완화할 예정이다. 셋째,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제도 등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해지고, 궁극적으로는 튼튼한 금융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

‘창조금융’ 및 ‘튼튼한 금융’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상생과 협력을 국가의 의무로 인식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는 고국천왕 16년(서기 194년)에 이미 진대법(賑貸法)을 도입하여 춘궁기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무이자로 곡식을 대여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의 의창(義倉)이나 상평창(常平倉), 조선의 환곡(還穀)이나 사창(社倉) 제도로 계승되었다. 우리나라는 서민금융을 국가의 책무로 수행해 온 오래된 그리고 귀한 전통을 갖고 있다 하겠다. ‘따뜻한 금융’은 이러한 오랜 전통들과 맥이 닿아있는 정책방향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금융의 포용력(financial inclusion)을 넓히고자 한다. 따뜻한 금융은 또한 금융소비자를 단순한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러한 금융의 포용력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탐욕에 대한 반성 하에 나타난 전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먼저 정부는 2013년 3월 25일 ‘신용회복의 디딤돌’로서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곧이어 3월 29일 기금을 출범시킨 이후 관련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해 오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 미만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4월 22부터 6월 12일까지의 기간 중 총 118,000명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 또한 기존 바뀐드림론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4월 1일부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4월 1일부

터 6월 12일까지의 기간 중 총 22,850건, 금액으로는 2,367억원에 해당하는 바뀔드립론 신청이 접수되었다. 물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은닉재산 발견 내지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이제는 비용이 아닌 투자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획단’을 설치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 조사하고, 일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기획단의 정식 출범 이전이라도 불합리한 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2013년 6월 6일에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방안이 발표되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기된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되, 일회성 처방이 아닌 법령의 일괄 제·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해 보다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제도개선 방안들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둔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따뜻한 금융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이 “보다 멀리 뛰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지는 작업이다. 앞으로도 금융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곳들을 찾아다니며 금융의 포용력을 확산시키는 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4. 새로운 금융 비전

1) 10·10 Value-up 및 핵심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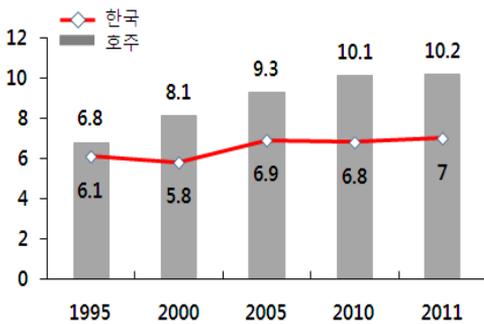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은 지난 60여 년간 실물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눈부신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 중요한 버팀목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산업 자체로서는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와중에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처절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금융산업 자체의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금융산업은 급속한 양적 성장과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질적 성장과 고도화라는 실제적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2013년 현재 우리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 대비 열위와 글로벌 선진금융 대비 열위라는 쌍둥이 격차, 즉 ‘twin gap’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제에서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6%대에 진입하였으

나, 2005년에 6.9%에 도달한 이후 2008년도 최대 7.1%를 기록한 것을 끝으로 정체되고 있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보이는 호주는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이 1990년대 중반이후 비슷한 기간 동안 6.8%에서 10.2%로 늘어났다(<그림 5> 참조).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2013년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국가 중 28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종합순위인 22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2년도에 비해서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5>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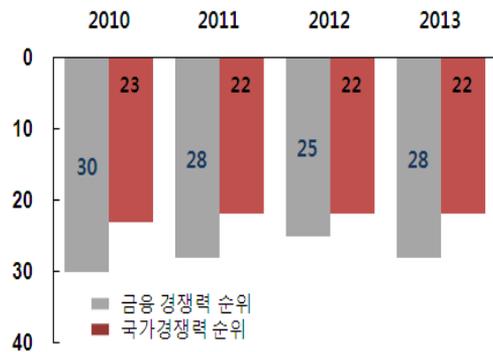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그림 6> 글로벌 경쟁력

(단위: 순위)



자료: IMD, 통계청.

결국 우리 금융산업이 그 동안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전체의 성장에 기여해 온 바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경제적 부(富)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경제가 생산하는 총부가가치에서 금융산업의 몫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금융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점을 감안할 때, 금융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금융업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재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2013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하 ‘10·10 value-up’)을 우리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였다. ‘10·10 value-up’은 단순한 수치의 달성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부문의 양적팽창을 지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창조금융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高)부가가치 신(新)성장산업으로서의 독자성장을 지향하는 ‘금융산업의 질적 내실화’를 의미한다. 실물대비 열위, 글로벌 금융대비 열위라는 쌍둥이 격차를 축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실물과 금융 간의 동행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향점이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면

서도 현실성을 겸비한 과제들의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3년 7월 현재 동년 하반기를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금융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T/F가 운영 중에 있다. 비전 작업에는 정부, 유관기관 및 학계와 함께 업권별 협회와 개별 금융회사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작업단 구성은 추진과정에서부터 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하는 한편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금융비전이 도출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0·10 value-up’을 달성하기 위한 단초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전술한 ‘금융정책으로서의 창조금융’은 시장실패의 보정을 통한 실물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금융비전으로서의 창조금융’은 금융 스스로의 창조 역량에 주목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산업의 빠른 양적 성장은 담보대출이나 중개수수료 등 손쉬운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영업 전략과 이를 용인한 시장구조에 기인한다. 그러나 기존 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전략을 통한 수익성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금융을 좌우할 핵심 동인(key driver)에는 세 가지의 큰 움직임이 있다. 첫째, 신흥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둘째, 100세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셋째,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핵심 동인들을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전략과제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2) 3대 전략과제

(1) 신흥국 시장 진출

첫 번째 과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의 성장 엔진은 아시아 신흥국이다. 우리나라 시장의 제한적 규모와 경쟁 상황을 감안하거나, 국내 경제가 직면하게 될 저성장 국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신흥국으로의 진출은 불가피하기까지 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미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나라들의 금융회사가 해당 시장에서의 기회를 인지하고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진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더구나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규제, 문화, 언어 등 환경차이로 인해 결코 녹녹치 않은 일이다.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신흥국들 간에 존재하는 유·무형적 연대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일부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 신흥국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경제성장의 롤모델로 삼고자 한다. 우리 경제를 벤치마크하고자 하는 나라들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이자 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온 나라라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다. 게다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공유하는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유대감이 훨씬 강하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양의 선진 금융기법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후발주자가 직접 개발하고 검증해 온 금융모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융한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신흥국에 대한 진출 환경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이다. 우선 K-POP 등 문화 한류가 확산되면서 이미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ASEAN+3 등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 관계도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우선 우리가 강점을 지닌 금융 인프라의 수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포함하는 정부의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인해 증권거래소, 예금보험제도, 부실채권정리 제도 등 이미 많은 금융 노하우들이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당장은 비용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금융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정리 제도와 노하우의 전파는 역내 투자자 네트워크의 구축, 역내 부실채권정리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PEF, 헤지펀드, IB들이 이러한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내 부실채권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기존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금융비전이 그리고 있는 미래 금융산업의 모습이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간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규제 및 감독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으로, 금융분야 지식공유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은 상호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방해하는 국내 규제와 감독규정 등을 확인하여 개정을 시도하는 한편으로, 신흥국들의 규제와 감독과 관련해서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고령화 시대 금융수요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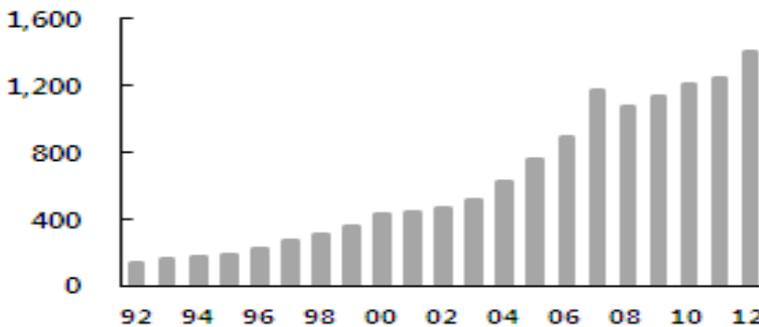
두 번째 과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연합(UN)은 2009년도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수가 2000년에 6개에서 2020년에는 31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이른바 호모 헉드레드(Homo Hundred) 시대의 도래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는 시점이 미국보다도 빠르다.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에 중차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령화는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복지비용 부담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복지비용 분담이나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개편 등을 둘러싸고 세대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불안이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노후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10명 중 6명은 독립적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60세 이상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2011년 기준 83.0%)이 지나치게 높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줄 연금제도도 아직 미흡하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도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⁵⁾ 2028년도까지 법정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그나마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하였을 경우이며 실제 평균가입기간이 27년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5.8~30.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향후 은퇴 및 노후 설계를 위한 새로운 금융 수요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결국 연금 등 장기 금융자산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의 경우, 1992년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연평균 12%씩 성장하면서 벌써 그 규모가 1,600조원을 넘어섰다(<그림 7> 참조). 퇴직연금의 이러한 성장세는 이후 호주 금융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림 7> 호주 퇴직연금 성장추세

(단위: 10억 호주달러)



자료: 호주통계청.

반면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2012년말 기준으로 67조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장기 금융자산들은 그 동안 단기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성장의

5) 1988년 제도 초기 70%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하였으나 1998년말 이를 60%로 하향 조정한 후 2007년도에는 2028년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현재 60세에서 2013년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최종적으로 65세가 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 자산운용 시장의 틀을 바꿈으로써 자산운용 시장의 질적 그리고 양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연계되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해외투자도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생애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자문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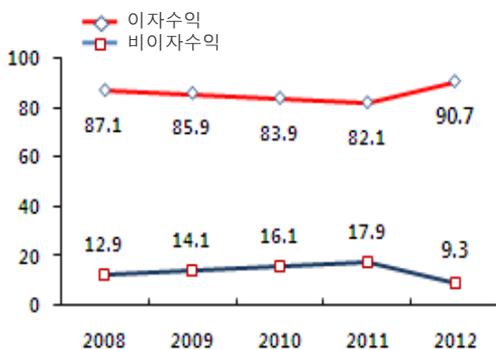
정부는 향후 금융이 '100세 시대'의 안전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소임을 실천하고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사적 연금시장의 성장과 자산관리시장의 육성방안,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 지원방안 등 다각도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우리의 고령화 대비 상품과 자산운용 노하우가 우리의 뒤를 이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될 여타 신흥국들로 수출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 활성화

세 번째 과제는 기업금융의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금리·저성장 등 성숙경제 단계에 진입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금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 중 이자이익의 비중은 90%가 넘는다(<그림 8> 참조).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실적은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중 6천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동 기간의 간접금융 규모는 452조원에 달한다(<그림 9> 참조).

<그림 8> 국내은행의 수익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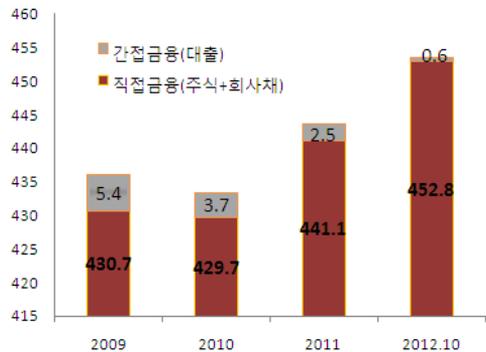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9> 중소기업 자금조달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금융감독원.

간접금융에서 발생하는 순이자마진을 둘러싼 금융행위는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제로섬(zero-sum) 게임에 가깝다. 물론 기업이 필요자금을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한 선별기능과 채권자로서의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제로섬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한다. 직접금융 시장의 경우에도, 기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단순한 재무적 투자행위는 간접금융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재무적 투자를 통한 자금의 움직임은 해당 증권의 가격을 형성하고, 해당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장래 수익흐름 예측치에 대한 신호효과를 가지며, 유리한 조건에서 증권의 추가적인 발행을 가능케 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자금 공여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만을 수령하거나 거래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고부가가치 금융과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단순한 자금증거나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서 피투자 대상기업의 시장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 투자행위로서 장기·전략적 투자 중심의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적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 스스로도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재무와 전략 멘토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2013년 7월 2일 자본시장법 개정은 바로 이러한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국형 IB, PEF와 헤지펀드 등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단순한 중개행위나 투자행위를 넘어서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금융이 실물과 나눌 수 있는 파이의 크기 자체를 키워나가야 한다.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의 활성화는 전술한 두 가지 전략과제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연금급 시장의 자금을 운용하고 기대수익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흥국 시장과 같이 변동성은 높더라도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아시아 지역의 부실채권 시장이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시장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수료 수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선진 금융회사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수익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수수료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도 단순 위탁매매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침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의 공익성이 중요시되는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향후 기존 비즈니스에서 수수료 자체의 인상을 통해 수수료 수익 증가를 도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개척, 혹은 수수료 부가가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수수료 수익의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금융자문 역량 강화를 통해 수수료 수익 증가를 도모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사고를 통해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발전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눈부신 성공의 주인공이다. 우리의 금융산업은 이 과정에서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도전과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나 대내적 위험요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대상이 없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때는 한 번도 없었다. 환경이 우호적이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기회를 찾아왔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본고는 먼저 한국 금융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본 뒤,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10년 후를 상정하고 우리 금융산업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관련 과제들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본고에서 개략적인 그림만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지만, 올 하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상이 제시될 것이다. 앞으로 제시될 금융비전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모든 금융회사가 비전에서 제시될 결과를 성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애초부터 금융산업에 대한 비전은 경쟁으로부터 수많은 탈락자들이 발생할 것임을 전제로만 성립한다.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비전에 입각하여 시장의 승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다. 아무도 탈락하지 않는 경쟁이란 안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떠한 발전도 성취할 수 없다. 기존의 규제개혁 노력과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결국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발전의 원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도 일정 부분 기인하고 있다.

물론 모든 금융회사들이 시장의 선도자가 되고자 시도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차별화 전략과 전문화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높은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진취적인 변화와 도전을 수반한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융의 미래, 금융의 비전이란 단순한 희망이 아닌 처절한 현실이다. 악재를 호재로 변화시키는 진취적이고도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